

주간 통일정세

2017-05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
|--------------------------------------|---------------------------------------|---|
| 정치 | 1.28 | 北김정은, 탕크사단 훈련지도...“美와 남조선 끌어버려야”(연합뉴스) |
| | | 美언론이 찾은 北마식령스키장 “주민 수천 명, 맨손 제설작업”(연합뉴스) |
| | | 北매체 “김정은, 설 쇠도록 은정...태양축복의 명절”(연합뉴스) |
| | | 北 ‘강원도정신’ 김정은 보위 슬로건 삼나(연합뉴스) |
| | 1.29 | 평양시 군수담당 간부, 작년 탈북하다 걸려 처형(연합뉴스) |
| | 1.31 | 北 김정일 75주년 생일 띄우기...해외준비모임 소개(연합뉴스) |
| | | 北 노동신문, 식량 자급자족은 또 하나의 수소탄(연합뉴스) |
| | 2.2 | 김정은, 신축 고아 교육시설 시찰...“동화세계 같다”(연합뉴스) |
| | | 北 여맹위원장 김정순에서 장춘실로 교체(연합뉴스) |
| | | 北 ‘인권대응 최일선’ 駐스위스 대사 한대성으로 교체(연합뉴스) |
| 北 “대북제재 법적근거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제차 주장(연합뉴스) | | |
| 2.3 | ‘장성택 처형’ 주도한 北실세 김원홍 보위상, 전격 해임(연합뉴스) | |
| | 北 중국국적 화교에게도 김씨일가 향한 충성 강요(연합뉴스) | |
| | 北 우리 위성 발사는 정정당당...시뮬레이션 못돼(연합뉴스) | |
| 경제 | 1.28 | 北무역일꾼 올해 외화벌이 할당액 배로 늘었다(연합뉴스) |
| | 1.31 | 中 쌀 지원 영향?...“北 쌀값 내리고 물가 안정세”(연합뉴스) |
| | 2.1 | 북한, 中 유커끌기 과격적 ‘개방관광’...제재속 외화벌이 혈안(연합뉴스) |
| | | 中, 작년 말 북한산 석탄 수입 한도 초과...유엔에 보고안해(연합뉴스) |
| | | 캄보디아내 북한식당 1곳 또 폐업...제재강화에 운영난(연합뉴스) |
| 사회 문화 | 1.28 | 北 인터넷 이용자 1만6천 명...전체 인구의 0.06%(연합뉴스) |
| | 1.30 | 北 북중 접경지역에 ‘감시센서’ 설치해 탈북자 단속(연합뉴스) |
| | 1.31 | 통일부 당국자 “北 승용차 개인 소유 경향 나타나”(연합뉴스) |
| | 2.1 | 北 김정은의 국산품 애호운동 실패 위기(연합뉴스) |
| | 2.2 | 추위 견디다 못해...북한軍, 중국 땅 넘어가 땀감 도별(연합뉴스) |
| 외교 국방 | 1.28 | 美 38노스 “北 영변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재가동”(연합뉴스) |
| | 1.29 | 北최태복, 동남아 순방하려다 무산...외교고립 심화하는 북한(연합뉴스) |
| | 1.30 | 평양 中대사관에 北고위인사들 집결...북중 ‘혈맹·협력’ 강조(연합뉴스) |
| | 1.31 | 美국무부, 北 원자로 재가동 징후에 “긴장조성 언행 삼가라”(연합뉴스) |

| | |
|----|--|
| | 北 러시아와 철도 협력 강화...유학생 확대(연합뉴스) |
| | 북한-러시아, 나진-하산 철도 인프라 확충 논의(연합뉴스) |
| 21 | 北 미국방 방한 앞두고 "한미 도발소동 예리하게 주시"(연합뉴스) 러 상원,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동의(연합뉴스) 일부 유럽국가, 北 유학생에 비자발급 거부(연합뉴스) |
| 22 | 美상원 외교위원장 '北정권교체-체제전복-ICBM 타격' 모색 거론(연합뉴스) 미국방 부차관보 "북핵, 단순한 협상카드만은 아니다"(연합뉴스) FT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재검토 착수"...북핵대응책 변화 주목(연합뉴스) CIA 前부국장 "北 핵장착 ICBM 이르면 2년 내 보유"(연합뉴스) |
| 23 | 매티스, 北핵무기 사용 시 "압도적 대응"(연합뉴스) |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 보도 일자 | 보도 내 용 | 수 행 자 | 비 고 |
|----------|----------------------------|-------------------------------|-----|
| 1.28. | 탱크잡갑 보병연대 겨울철 도하공격 진술연습 지도 | 황병서, 리명수, 리영길, 김송철, 김광혁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 28.

■ 北김정은, 탱크사단 훈련지도…“美와 남조선 쓸어버려야”(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05탱크사단을 찾아 탱크장갑보병연대의 겨울 도하 공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증강한 땅크(탱크)장갑보병련대(연대) 겨울철도하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시였다”고 전함.
- 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명수 군 총참모장, 리영길 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등이 수행함.

2017. 2. 2.

■ 김정은, 신축 고아 교육시설 시찰…“동화세계 같다”(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교를 시찰함. 평양초등학교와 지난해 7월 신축된 평양중등학교는 모두 고아를 위한 교육기관임.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평양초등학교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2일 보도함.
- 김정은의 이날 시찰에는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했으며, 김수길 평양시당위원장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 29.

■ 평양시 군수담당 간부, 작년 탈북하다 걸려 처형(연합뉴스)

- 평양시의 군수 담당 간부가 지난해 남포항을 통해 탈북하다 검문에 걸려 처형됐다고 복수의 대북소식통이 29일 밝힘.
-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평양시 제2경제위원회(군수산업부문) A 설비국장은 지난해 5~6월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남포항을 통해 배에 숨은 채로 가족과 함께 탈북을

시도하다가 당국의 검문에 걸려 체포됨.

- A 국장은 처형됐고, 그의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짐.

2017. 2. 2.

■ 北 여맹위원장 김정순에서 장춘실로 교체(연합뉴스)

- 북한 전업주부 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 중앙위원장이 김정순에서 장춘실로 교체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여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회의에서 김정순 위원장을 사업상 관계로 소환하고 장춘실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새로 임명된 장춘실의 구체적인 이력을 소개하지는 않았음.

■ 北, ‘인권대응 최일선’ 駐스위스 대사 한대성으로 교체(연합뉴스)

- 북한이 신임 스위스 주재 대사에 한대성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스위스 연방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한대성이 임명되었다”고 짧게 보도함.
- 한대성은 지난 2010년 4월 주(駐) 스위스 대사에 임명된 서세평의 후임으로 보임. 북한은 스위스 주재 대사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각종 국제기구를 상대하는 북한 대표부의 대사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017. 2. 3.

■ ‘장성택 처형’ 주도한 北실세 김원홍 보위상, 전격 해임(연합뉴스)

- 북한 내 실세로 꼽히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지난해 말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을 받은 이후 해임된 것으로 3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밝은 한 대북 소식통은 “작년 말 당 조직지도부의 국가보위성에 대한 대대적 검열의 결과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책임을 지고 김원홍 보위상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조직지도부 검열의 결과로 김 보위상이 사실상 해임되면서 계급도 대장(별 4개)에서 중장(별 2개)으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국가보위상은 우리의 국가정보원장 격임.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1. 28.

- **美언론이 찾은 北마식령스키장 “주민 수천 명, 맨손 제설작업”(연합뉴스)**
 - “김정은의 사람들이 유복한 동료 주민들을 위한 길을 트려고 혹한에 맨손으로 뼈 빠지게 제설작업을 한다”
 - 최근 북한 마식령 스키장을 직접 취재한 미국 NBC 방송은 북한 주민 수천 명이 스키장으로 가는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제설 장비 없이 맨손으로 눈을 치우는 광경을 27일(현지시간) 보도함.
 - NBC에 따르면 이 길에서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에 얼굴이 빨개진 남성, 여성, 어린이 들은 재킷, 스카프, 모자로 무장하고 곡괭이와 막대기로 눈을 메트로놓처럼 때려 부수고, 나무 삼으로 눈을 옆으로 밀쳐냄.

2017. 1. 31.

- **北, 김정일 75주년 생일 띄우기…해외준비모임 소개(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보름가량 앞두고 본격적인 분위기 띄우기에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인도와 덴마크, 쿠웨이트, 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서 김정일 탄생 75주년 경축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토론회와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3일 러시아와 민주 콩고에서 김일성 탄생 105주년과 김정일 탄생 75주년 경축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열렸고, 지난 20일 루마니아에서 광명성절 경축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이날 전함.

2017. 2. 3.

- **北, 중국국적 화교에게도 김씨일가 향한 충성 강요(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자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화교들에게 김 씨 일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에서) 화교들은 주민들과 똑같이 김 씨 일가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화교들 대부분이 조선(북한)에 나온 것을 후회하며 중국으로의 귀환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화교들은 해마다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면 으레 ‘충성의 노래모임’을 준비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금 상납도 강요받고 있다고 말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1. 28.

■ 北매체 “김정은, 설 쇠도록 은정…태양축복의 명절”(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설을 쇠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며 명절을 체제 선전에 활용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내 나라에 꽃피는 미풍양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마다 설 명절을 의의 깊게 쇠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팽이치기, 연 띄우기, 줄넘기, 썰매 타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와 유희오락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안겨온다”고 말함.

■ 北, ‘강원도정신’ 김정은 보위 슬로건 삼내(연합뉴스)

- 북한이 ‘강원도 정신’ 띄우기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일각에서 강원도 원산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고향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강원도 정신’을 매개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심각한 경제난과 자연재해까지 겹쳐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김정일 시절에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을 구호로 내걸었던 과거를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제기됨.

2017. 1. 31.

■ 北 노동신문, 식량 자급자족은 또 하나의 수소탄(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식량 자급자족은 원수들의 머리 위에 철주를 내리는 또 하나의 수소탄과 같으면서 과학농사를 경제 강국 건설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올해 농업 전선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올리자’라는 1면 사설을 통해 “과학농사는 경제 강국 건설의 주타격 전방에서의 승리와 비약의 결정적 담보”라고 밝힘.
- 신문은 “지금 우리 당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담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면서 “과학농사를 중시하는 것은 식량의 자급자족으로 적들의 비열(비열)하고 극악한 포위환에 파열구(파열구)를 내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2017. 2. 2.

■ 北 “대북제재 법적근거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재차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일 국제 법률 전문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함.
-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국제사회와 법률단체들이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국제적인 연단(포럼)을 조직할 데 대한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해 나설 것을 바란다”고 촉구함.
-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유엔 기구가 있는)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덧붙임.

2017. 2. 3.

■ 北, 우리 위성 발사는 정정당당...시빗거리 못돼(연합뉴스)

- 북한이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불공정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우리의 위성 발사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 인류의 문명발전과 과학 기술적 진보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사업으로서 정정당당하며 그 누구의 시빗거리(시빗거리)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지난달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논평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해석이 나옴.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7. 1. 28.

- **北무역일꾼 올해 외화벌이 할당액 배로 늘었다(연합뉴스)**
 - 해외로 파견된 북한 무역일꾼들의 올해 외화벌이 목표 할당액이 작년보다 배로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됨.
 - 28일 북한민주화운동 단체인 조선개혁개방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무역기관 간부나 무역일꾼들이 연말 총화(결산)를 거쳐 올해 초 신년 과제를 할당받았는데 (금액이) 지난해의 200% 정도로 늘었다”고 밝힘.
 - 이 무역일꾼은 “중국에 나와 있는 목란 무역회사는 지난해 액상계획(현물 계획이 아닌 금액상의 과제) 과제가 14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250만 달러로 상향됐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2017. 1. 31.

- **中 쌀 지원 영향?...“北 쌀값 내리고 물가 안정세”(연합뉴스)**
 - 북한 내부시장에서 쌀값이 내리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31일 보도함.
 - 이는 중국이 지난해 홍수 피해가 난 북한에 대량으로 쌀을 지원했고, 북한 내 벼 작황이 호전됐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옴.
 - 양강도 소식통은 “이전(김정일 시기)에는 장마당 통제로 쌀 가격이 오르곤 했지만, 지금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라면 갑자기 물가가 뛰는(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2. 1.

■ **북한, 中 유커 끌기 파격적 '개방관광'...제재속 외화벌이 혈안(연합뉴스)**

- 중국에 석탄, 철광석 등을 수출해 외화를 충당했던 북한이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중국인에게 파격적인 개방 관광으로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이는 올해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강화 등으로 북한의 '외화 기근'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보임.
- 특히,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여서, 북한으로선 자원 수출·무기 판매·인력 송출 등이 막힌 중국에서 손실을 메우는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中, 작년 말 북한산 석탄 수입 한도 초과...유엔에 보고안해(연합뉴스)**

- 중국이 작년 말 북한산 석탄 수입량의 한도를 초과했으나 이를 유엔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 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 대표부는 지난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아직까지 2016년 12월 석탄 조달 물량에 관한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힘.
- 앞서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안 2321호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11~31일 북한산 석탄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캄보디아내 북한식당 1곳 또 폐업...제재강화에 운영난(연합뉴스)**

-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북한 식당 2곳 가운데 1곳이 지난해 10월 문을 닫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RFA는 현지 한인회 사무국장을 인용해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운영 중이던 북한 식당 '평양냉면관'과 '평양친선관' 가운데 '평양친선관'이 지난해 10월 문을 닫았다고 전함.
- 당시 정부는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 2곳이 작년 3월과 7월 각각 문을 닫았다고 전함. 캄보디아 내 북한 식당은 2015년 말까지 최대 8곳이 영업했지만, 현재는 4곳만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짐.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1. 30.

■ 北, 북·중 접경지역에 '감시센서' 설치해 탈북자 단속(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설치해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사정에 밝은 북수의 대북 소식통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위성이 북·중 접경지역 철책에 탈북자 단속용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새로 설치했다”고 전함.
- 그간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에 적외선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무인지상감시센서가 설치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임.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1. 28.

■ 北 인터넷 이용자 1만6천 명...전체 인구의 0.06%(연합뉴스)

- 북한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하위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VOA는 지난 24일 캐나다의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인 핫스위트와 컨설팅업체 위아소셜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북한의 인터넷과 사회연결망 서비스 이용자는 1만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06%에 불과하다”고 전함.
- 보고서는 “조사대상 213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며 전 세계의 인터넷 이용률이 평균 37%임을 감안할 때 큰 격차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함.

2017. 1. 31.

■ 통일부 당국자 “北, 승용차 개인 소유 경향 나타나”(연합뉴스)

- 북한 경제의 시장화 영향으로 북한 주민의 승용차 개인 소유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31일 전해짐.

-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승용차 개인 명의 등록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탈북민 조사에 따르면 (북한 내) 승용차의 개인 소유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작년 말부터 개인 명의 차량 등록을 허용했다는 보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힘.
- 북한 민법은 승용차의 개인 소유와 상속을 허용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은 사업소나 기관 명의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2017. 2. 1.

■ 北 김정은의 국산품 애호운동 실패 위기(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산화’ 장려 정책에 따라 북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신제품 생산에 나섰다지만 열악한 품질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국산품 애호운동이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전국의 주요 식료공장들에서 시작된 판매부진 현상이 피복류를 생산하는 경공업 공장들과 외화벌이 기관들까지 번지고 있다”며 “제품 판로가 막힌 경공업 공장들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고 전함.
- 앞서 김정은은 지난 2015년 신년사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지시함.

2017. 2. 2.

■ 추위 견디다 못해···북한軍, 중국 땅 넘어가 떨감 도벌(연합뉴스)

- 북한 군인들이 난방용 떨감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가 도벌을 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떨감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중국 쪽 산에서 통나무를 베어오는 경비대 병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난방용 떨감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식사당번을 맡은 한 개 분대가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며 병사들이 3명씩 조를 이뤄 썰매를 끌고 40리 이상 떨어진 인적 없는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 31.

■ 미국무부, 北 원자로 재가동 징후에 “긴장조성 언행 삼가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됐다는 미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에 긴장조성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함.
-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논평 요구에 “북한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언행을 삼가고 국제적 약속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힘.
- 애덤스 대변인은 “우리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38노스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확인은 거절함.

2017. 2. 1.

■ 北, 美 국방 방한 앞두고 “한미 도발소동 예리하게 주시”(연합뉴스)

- 북한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둔 1일 한미의 미사일 방어 공조 등을 비난하며 “최대의 경각성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위협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징벌을 청하는 무분별한 전쟁광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로 노골화되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소동을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 논평은 지난달 20~22일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일 상전들과 미사일 방위 공조를 추진한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그것은 실로 가소로운 망동”이라고 비난함.

2017. 2. 2.

■ 美 상원 외교위원장 ‘北정권교체-체제전복-ICBM 타격’ 모색 거론(연합뉴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31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북핵 청문회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해법을 논의함.
- 상원 외교위가 각료 인준청문회 이외에 현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연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그만큼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임.
- 이날 청문회에선 제재 위주의 대북접근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정권교체, 체제전복 활동,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선제타격 필요성

등 격한 주장들이 쏟아짐.

■ **미국방 부차관보 “북핵, 단순한 협상카드만은 아니다”(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할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분석함.
- 엘레인 번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동맹과 확장억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북한 노동당위원장)에게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다”면서 “그가 역내 동맹과 역내 및 광 주둔 미군,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능력, 다시말해 핵무기 운반능력을 개발하고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진짜라고 본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반발에 대처하면서 많이 시달려왔다”면서 “사드는 한국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가졌으면 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임.

■ **FT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재검토 착수”…북핵대응책 변화 주목(연합뉴스)**

-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 이전 미 정권과는 다른 두드러진 정책 변화를 모색할지 주목됨.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우려 등에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함.

2017. 2. 3.

■ **매티스, 北핵무기 사용 시 “압도적 대응”(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음.
- 매티스 장관은 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보다 더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는 결기를 드러냄.
- 그는 “(북한의)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라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나. 북·중 관계

2017. 1. 30.

■ 평양 中대사관에 北고위인사들 집결…북중 ‘혈맹·협력’ 강조(연합뉴스)

-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북한 고위 인사들이 대거 집결해 북·중 혈맹 관계와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최근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북한으로선 중국의 도움이 절실해졌기 때문으로 보임.
- 지난 24일 평양의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춘제 리셉션에는 김영대 부위원장을 포함해 강하국 보건상 겸 북중친선협회위원장, 이창근 북한 노동당 중앙국제부부부장, 이길성 외무성 부상, 김인범 문화성 부상, 박경일 대외문위부위원장, 심국룡 외교단사업총국장 등 북한노동당중앙국제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인민무력성,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외무성, 대외경제성 등 당정군 각 부서의 총 70여 명 참가함.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1. 31.

■ 北, 러시아와 철도 협력 강화…유학생 확대(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철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RFA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인용해 “러시아 연방철도청 대표단이 지난 27~30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고급 철도인력 양성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함.
- 러시아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 평양철도대학 학생들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국립극동교통대학 유학 사업을 연장기로 합의했다고 RFA는 밝힘.

■ **북한-러시아, 나진-하산 철도 인프라 확충 논의(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철도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31일 보도함.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청 차관 이고리 미축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27~30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고급 철도인력 양성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함.
- 이번 러시아 대표단의 북한 방문은 지난해 6월 장혁 북한 철도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철도공사(RZD) 사장을 만나 양국 간 철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뒤이은 것임.

2017. 2. 1.

■ **러 상원,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동의(연합뉴스)**

- 러시아 상원이 1일(현지시간) 자국 정부가 지난 2015년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비준 동의했다고 현지 의회 신문이 보도함.
-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 공조 분야 주요 협정임. 인도 대상은 형사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인임.
- 이 조약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 2015년 11월 17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근영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체결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 29.

■ **北최태복, 동남아 순방하려다 무산...외교고립 심화하는 북한(연합뉴스)**

-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올해 초 동남아시아 각국을 순방하려 했으나 상대국들이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짐.
- 29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의 국회의장 격인 최 의장이 지난달 말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측에 방문 의사를 타진했음. 올해 2~3월 의회 간 교류 차원에서 각국 최고입법기구를 방문해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임.
- 하지만 해당 국가들이 이달 초·중순 잇달아 방문 접수를 거부하면서 최 의장의 동남아 순방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이 소식통은 전함.

2017. 2. 1.

■ 일부 유럽국가, 北 유학생에 비자발급 거부(연합뉴스)

-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북한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폴란드 정부가 비자를 내주지 않아 (평양과기대 출신) 학생들이 유학길에 오르지 못했다”며 “앞으로 유럽보다 브라질이나 러시아, 중국 등으로 유학 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독일 외교부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원칙적으로 양국 간 상호 이해가 있는 분야에서 북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경우 북한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1. 28.

■ 美 38노스 “北, 영변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재가동”(연합뉴스)

-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7일(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지난 22일 영변 핵단지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함.
- 38노스는 “사진을 보면 원자로 냉각수 출구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며 “이는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말함.

2017. 2. 2.

■ CIA 前부국장 “北, 핵장착 ICBM 이르면 2년 내 보유”(연합뉴스)

- 북한이 이르면 2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직 중앙정보국(CIA) 고위인사가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존 맥로린 전 CIA 부국장은 1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4년 안에, 더 이르면 이번 115차 미국 의회 회기가 끝나는

- 2019년 1월 이전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매크로린 전 부국장은 “북한이 현재 12개에서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5년 내 100개까지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한국 | 미국 |
|-------|------|--|--|
| 한미 관계 | 1.30 | 백악관, 트럼프·黃권한대행 통화서 北위협에 방위 강화키로(연합뉴스) | |
| | | 軍, 트럼프 확장억제 재확인·사드배치 공감에 '안도'(연합뉴스) | |
| | 1.31 | 한·미 국방장관 北 도발 가능성...유사시 즉각 대응(연합뉴스) | |
| | 2.1 | 윤병세, 美공화 前하원의원 만나 "관계강화 지지" 요청(연합뉴스) | |
| | | 산업장관, 한미 FTA 앞날 예단 못해... 재협상 대비(연합뉴스) | |
| | 2.2 | 외교부, 힐러슨 美국무 취임 환영...한미관계 도약 기대(연합뉴스) | |
| | | 외교부, 美 대북 선제타격론에 "북핵 위급성 반영한 것"(연합뉴스) | |
| | | 美 매티스 장관 방한 맞춰 對韓 미사일 판매 승인(연합뉴스) 매티스美국방, 북핵 최우선 안보현안... 사드배치 차질 없이 추진(연합뉴스) 美국방장관 北위협 대응에 한미 양국이 어깨 나란히 해(연합뉴스) | |
| | 2.3 | 한미, 사드 연내 배치 완료...오로지 北위협 방어용 | 美국방 "사드, 오직 北도발 때문...다른 나라는 걱정할 필요 없어"(연합뉴스) |
| | | 한민구 "매티스 방한, 北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 매티스, 韓국민·美명력 보호위해 사드 등 조치 취할 것 |

| 분류 | 일자 | 한국 | 중국 |
|-------|------|-------------------------------------|---|
| 한중 관계 | 1.30 | | 회장품·관광·삼계탕·공연...중국의 사드보복 무차별적 확대(연합뉴스) |
| | 1.31 | | 中관영매체 “한중수교 25주년에도, 사드탓 협력보다 충돌 우려”(연합뉴스) |
| | | | |
| 분류 | 일자 | 한국 | 일본 |
| 한일 관계 | 1.28 | | 日 이번엔 교과서 도발...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일본 땅’ 명기(연합뉴스) |
| | 1.31 | 외교부, 日학습지도요령 독도 영유권 명기 용납 못 해(연합뉴스) | |
| | | | 日니혼게이자이, 한일중 정상회의 당분간 보류되는 방향(연합뉴스) |
| | 2.2 | | 한일의원연맹 일측회장, 한국정부가 부산소녀상 철거해야(연합뉴스) |
| | | | ‘소녀상’ 호칭까지 문제 삼는 日 “위안부상 통일 추진”(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한국 | 러시아 |
| 한러 관계 | 2.3 | | 러시아도 ‘사드 압박’...주한대사 “배치하면 대응 불가피” |

2. 주변국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미국 | 중국 |
|-------|-----|--|----------------------|
| 미중 관계 | 2.1 | 트럼프 “日·中·獨 환율조작” 맹공...달리 ‘뚝’ 외환시장 ‘출렁’(연합뉴스) | |
| | 2.2 | | 트럼프 환율조작국 공격에 中 “필수조 |

| 분류 | 일자 | 건에 해당하지 않아" 반박(연합뉴스) | |
|-------|------|----------------------|--|
| | | 미국 | 일본 |
| 미일 관계 | 1.29 | 아베 "日기업 美에 기여했다" 발언에 | 트럼프 "고용 창출해 달라" (연합뉴스) |
| | 1.30 | | 정상회담 방해될다...日정부, 트럼프 반이민정책 무대응(연합뉴스) |
| | 2.1 | | 日아베, 트럼프에 수십만 명 고용창출 경제협력 선물세트 준비 중(연합뉴스) |
| | 2.2 | | 아베 "트럼프의 '日 환율조작국' 비판 맞지 않아" 반박(연합뉴스) |
| | | | 日아베, 트럼프에 '물량공세'...美서 '70만 명 고용' 투자한다(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미국 | 러시아 |
|-------|------|---|---|
| 미러 관계 | 1.29 | 트럼프 취임 후 푸틴과 첫 통화...“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증진” 합의(연합뉴스) | |
| | | | 러 상원 부위원장, 마러 힘 합치면 한 달 내 IS 끝장낼 것(연합뉴스) |
| | | | 크렘린궁, 트럼프-푸틴 통화서 美 대러 제재 해제 논의 안 돼(연합뉴스) |
| | 2.1 | | 주미 러 대사, 푸틴-트럼프 정상회담 시기·장소 얘기하기 일러(연합뉴스) |
| | | | 러 정보기관 고위간부, 美CIA에 비밀 정보 제공 혐의 체포(연합뉴스) |
| | 2.2 | 트럼프 정부 '러시아 크림 병합 인정하 지 않는다' 입장 확인(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중국 | 일본 |
|-------|-----|---------------------------------------|----|
| 중일 관계 | 2.2 | 중·일 또 실전...“일본, 영국서 ‘중위협론’ 퍼뜨려”(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중국 | 러시아 |
|-------|-----|----|---|
| 중러 관계 | 2.2 | | 러 첨단전투기 수호아-35 10대 올해 안 에 중국에 인도(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일본 | 러시아 |
|-------|-----|---|-----|
| 일러 관계 | 2.2 | 러일 분쟁지역 '공동경제활동' 진전되나...3월 첫 공식협약(연합뉴스) | |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 30.

■ 백악관, 트럼프-황권한대행 통화서 北위협에 방위 강화키로(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30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방위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힘.
-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역지력이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을 동원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함.
- 백악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공동 방위능력 강화에 조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임.

■ 軍, 트럼프 확장억제 재확인·시드배치 공감에 ‘안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오바마 정부 때와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미동맹에 있어선 기존의 정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군이 안도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
-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을 재확인한 것임.

2017. 1. 31.

■ 한·미 국방장관, 北 도발 가능성…유사시 즉각 대응(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함.
- 양국 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한미의 전환기적 상황을 오판해 언제든지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함.

- 양국 장관은 이에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 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함.

2017. 2. 1.

■ 윤병세, 美공화 前하원의원 만나 “관계강화 지지” 요청(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덴 버튼 미국 전 하원의원 등 방한단을 면담하고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 이번 미국 측 방한단에는 버튼 전 하원의원과 맷 새먼 전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원장 등 전 공화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특사 등이 참여함.
- 외교부는 “이번 윤 장관의 미측 방한단 접견은 우리 정부의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주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미 의회, 학계, 언론계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산업장관, 한미 FTA 앞날 예단 못해…재협상 대비(연합뉴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미자유협정(NA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FTA에 대해 총점검하겠다고 했고 거기에는 한미FTA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FTA가 거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협상 가능성이 작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아직 예단할 시기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임.

2017. 2. 2.

■ 외교부, 힐러슨 美국무 취임 환영…한미관계 도약 기대(연합뉴스)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렉스 힐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한미관계 발전을 기원함.

-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은 인준 청문회 등 계기에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제재·압박 공조 등을 강조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틸러슨 장관의 취임은 앞으로 한미 양국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조 대변인은 또 “지난 1월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데 이어서 양국 고위급 간 다양한 협의가 예정돼 있는 바 틸러슨 장관과도 주요 관심사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함.

■ 외교부, 美 대북 선제타격론에 “북핵 위급성 반영한 것”(연합뉴스)

- 외교부는 2일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 위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미 상원 외교위의 청문회에 대해 “미국 제115대 회기 상원 외교위가 첫 청문회로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은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미 정부의 인식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함.

■ 美, 매티스 장관 방한 맞춰 對韓 미사일 판매 승인(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2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과 때를 맞춰 미 국방부가 1천600억 원(1억4천만 달러) 규모의 대한(對韓) 미사일판매를 승인함.
- 디펜스 뉴스, 스포트니크 인터내셔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DSCA)는 AIM-9X 사이더 와인더 블록 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60발과 부품 등 7천만 달러 규모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국무부도 의회에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고 외신은 전함. 디펜스 뉴스는 성능이 개량된 두 미사일의 한국 판매는 매티스의 ‘방한 선물’이라고 평가했으나, 국무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판매를 요청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함.

■ 매티스美국방, 북핵 최우선 안보현안…사드배치 치질 없이 추진(연합뉴스)

-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현안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매티스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함.
-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함.

■ 미국방장관, 北위협 대응에 한미 양국이 어깨 나란히 해(연합뉴스)

-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응해 나가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밝힘.
-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황 권한대행 측이 밝힘.
- 매티스 장관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미 양국 간의 동맹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함.

2017. 2. 3.

■ 한미, 사드 연내 배치 완료…오로지 北위협 방어용

- 한미 국방장관은 3일 열린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체계를 올해 중에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라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함.
-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지속 유지,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관계를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회담 결과를 전함.

■ 미국방 “사드, 오직 北도발 때문…다른 나라는 걱정할 필요 없어”(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은 예측 불가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힘.
- 매티스 장관은 이날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함.
- 매티스 장관의 이 발언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 사드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로, 절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됨.

■ 한민구 “매티스 방한, 北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매티스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매티스 장관이 방한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북한에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함.
- 한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환경과 굳건한 한미동맹체제 발전,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주한미군 사드(THAAD) 체계 배치 등 동맹현안의 안정적 추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함.

■ 매티스, 韓국민·美병력 보호위해 사드 등 조치 취할 것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일 “우리는 한국 국민, 한국 국민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병력의 보호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비롯한 방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함.
-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위협적인 수사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확장억제력 보장을 유지하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힘.

나. 한 중 관계

2017. 1. 30.

■ **화장품·관광·삼계탕·공연...중국의 사드보복 무차별적 확대(연합뉴스)**

- 면세점과 화장품 등의 업종이 폭발적 중국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대박' 실적을 거뒀지만, 마냥 즐거워할 처지가 아님.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성격으로 한국 서비스·상품 소비에 대한 중국의 본격적 규제가 시작될 경우 높은 의존도만큼 타격도 클 수 있기 때문임.
- 더구나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은 관광, 화장품 뿐 아니라 공기청정기, 양면기 등 다양한 품목의 제조업과 문화 공연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여서 한국 경제 전반의 중국 리스크(위험)은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됨.

2017. 1. 31.

■ **中관영매체 “한중수교 25주년에도, 사드탓 협력보다 충돌 우려”(연합뉴스)**

- 한반도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올해 한중간 수교 25주년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31일 보도함.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에서 사드배치는 양국의 정치적 연대를 약화시켜 과거 양국의 협력에서 볼 수 있었던 생기와 활력을 빼앗고 민족주의의 부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함.
-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의 보수적 정치인들이 미국의 곡조에 춤을 추는 그동안의 관행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함.

■ **中, 사드갈등 속 한국행 크루즈선도 줄었다(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행 전세기를 불허함에 이어 한국행 크루즈선 운항도 내달까지 감축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따른 압력이 관광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줌.
-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 크루즈 선사 MSC는 중국 텐진(天津)에서 한국을 거치는 항로를 1~2월 평소 대비 3회 줄이고 일본으로 바꾸기로 함. 그러나 3월 이후도 한국행 운항 재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짐.
-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저가 여행을 막는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 여행객을 20% 정도 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6개월간 시범 기간으로 정해놓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내년에 양국 관계가 더 경색되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말함.

다. 한·일 관계

2017. 1. 28.

- **日 이번엔 교과서 도발…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일본 땅’ 명기(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초·중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사실을 왜곡하는 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한 일본 측의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및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협상 중단,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 땅’ 망언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에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일본이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확립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외무상의 망언에 이어 청소년들에게도 왜곡된 교육을 강요할 방침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일관계는 한층 냉각되며 출구를 찾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음.

2017. 1. 31.

- **외교부, 日 학습지도요령 독도 영유권 명기 용납 못 해(연합뉴스)**
 - 외교부는 31일 일본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조 대변인은 이어 “만일 언론에 보도된 방향대로 구체화할 경우 정부로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함.
- **日 니혼게이자이, 한일중 정상회의 당분간 보류되는 방향(연합뉴스)**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조기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당분간 보류되는 방향”이라고 31일 전함.
 - 신문은 “작년 말 부산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지 1개월을 맞았다”고 전한 뒤 “(한일중 정상회의가 보류되는 까닭은)한일 간에 대화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중국도 한일 간 대립을 관망하고 있어 개최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측의 의무는 다하고 있으니 한국에도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2017. 2. 2.

■ 한일의원연맹 일축회장, 한국정부가 부산소녀상 철거해야(연합뉴스)

- 일본의 여의원들이 참여하는 한일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회장이 2일 한국 정부가 부산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압박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인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한의원연맹 총회 인사말을 통해 부산 소녀상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다. 한국정부가 책임을 갖고 철거하도록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의원들과 연대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소녀상’ 호칭까지 문제 삼는 日 “위안부상 통일 추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국의 ‘소녀상’ 호칭을 문제 삼아 ‘위안부상’으로 통일할 계획으로 알려짐.
- 소녀상이라는 말 속에는 애꿎은 소녀들이 일본군에 끌려가 능욕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이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임.
- 그동안 일본 내 극우세력이 이런 주장을 해왔으나, 일본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음.

라. 한·러 관계

2017. 2. 3.

■ 러시아도 ‘사드 압박’…주한대사 “배치하면 대응 불가피”(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러시아대사는 3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함.
- 티모닌 대사는 이날 서울 러시아대사관에서 가진 한국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 “사드 배치가 한반도 정세나 역내 평화 확보와 관련해 위험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힘.
- 다만 그는 “사드 배치가 한러관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오늘은 얘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아직 사드가 아직 배치되지 않은 시점이고 우리는 배치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2. 1.

■ 트럼프 “日·中·獨 환율조작” 맹공…달러 ‘뚝’ 외환시장 ‘출렁’(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독일 등 경제 대국의 통화 가치를 싸잡아 문제 삼으며 이들 국가가 환율조작국이라고 맹비난함.
-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으로 달러가치는 약 두 달 만에 최저로 떨어진 반면에 엔화 가치는 112엔대 초반까지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10원 넘게 오르는 등 외환시장이 출렁 거림.
-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6개 주요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환산한 달러지수(DXY)는 1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 99.430까지 떨어졌다가 등락을 거듭하며 99.512로 마감함.

2017. 2. 2.

■ 트럼프 환율조작국 공격에 中 “필수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반박(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문제 삼으며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중국은 자국이 환율 조작국의 필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 2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쉬창원(徐長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며 중국의 모든 생산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함.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 독일의 통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고 비난을 퍼부었음.

나. 미·일 관계

2017. 1. 29.

■ 아베 “日기업, 美에 기여했다” 발언에 트럼프 “고용 창출해 달라”(연합뉴스)

-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 양국 정상 간 첫 전화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양국 간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통상 분야에서는 시각차이를 드러냄.
- 2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새벽(일본 시간 기준)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자동차산업 등 미국의 경제에 공헌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함.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일본 자동차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함.

2017. 1. 30.

■ 정상회담 방해될라...日정부, 트럼프 반이민정책 무대응(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반대 행정명령’에 대해 ‘무대응’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미국 내에서 이 행정명령이 오히려 “테러리스트 모집을 더욱 돕게 될 것”이라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다음달 2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난민 문제, 테러대책은 세계적 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라고 말함.

2017. 2. 1.

■ 日아베, 트럼프에 수십만 명 고용창출 경제협력 선물세트 준비 중(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의 경제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고속철도, 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미일성장고용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패키지를 통해 일본 정부는 수십만 명 미국 현지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할 계획임.

2017. 2. 2.

■ 아베 “트럼프의 ‘日 환율조작국’ 비판 맞지 않아” 반박(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비판한데 대해 “그런 비판은 맞지 않다”고 말함.
-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해 오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방침임을 시사함.
- 다만 아베 총리는 “경제와 안보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미일 동맹 등 안보와 환율 문제 등은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

■ 日아베, 트럼프에 ‘물량공세’…美서 ‘70만 명 고용’ 투자한다(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에서 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제시할 방안은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4천500억 달러(약 515조8천350억 원)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 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불공정하다거나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엔화 약세를 유지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는데 대한 대응 차원임.

다. 미·러 관계

2017. 1. 29.

■ 트럼프 취임 후 푸틴과 첫 통화…“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증진” 합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양자 및 국제 현안과 관련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힘.
- 크렘린궁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미·러 정상 간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업무 수행에서 성공을 기원했다”면서 “대화 과정에서 양측 모두가 건설적이고 대등하며 상호 유익한 기초 위에서 미-러 관계의 안정화와 발전을 위한 적극적 공동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전함.

- 이어 “테러리즘과의 전쟁, 중동 정세, 아랍-이스라엘 분쟁, 전략적 안정성과 비확산, 이란 핵프로그램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등의 국제 현안이 상세하게 논의됐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본적 문제들도 거론됐다”면서 “이 분야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서 두 나라가 파트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 러 상원 부위원장, 마-러 힘 합치면 한 달 내 IS 끝장낼 것(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이 힘을 합치면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한 달 안에 궤멸시킬 수 있다고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전망함.
-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위원장 프란츠 클린체비치는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내 IS 세력 등 국제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양국 간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힘.
- 클린체비치는 그러나 미국의 모든 기관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일부 (미국 측) 권력 부서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함.

■ 크렘린궁, 트럼프-푸틴 통화서 美 대러 제재 해제 논의 안 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 해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크렘린궁이 28일(현지시간)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자 및 국제 현안을 논의함.
- 크렘린궁 대변인 격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양국 정상 간 통화가 끝난 뒤 인테르팍스 통신에 “대러 제재 해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함.

2017. 2. 1.

■ 주미 러 대사, 푸틴-트럼프 정상회담 시기·장소 얘기하기 일러(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해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31일(현지시간) 밝힘.

- 세르게이 키슬랴크 대사는 이날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지도자가 만나기 위해선 우선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새 행정부는 이제 막 백악관에 들어왔다”고 설명함.
- 그는 “우리는 그들(미국 파트너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언제, 어떤 문제들이 정상 간에 논의될지에 대해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도 필요하다”고 덧붙임.

■ 러 정보기관 고위간부, 美CIA에 비밀정보 제공 혐의 체포(연합뉴스)

- 지난주 국가반역 혐의로 구속된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 고위 간부들이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수사 관계자가 31일(현지시간) 밝힘.
- 이 관계자는 인테르팍스 통신에 “FSB 정보보안센터 과장인 세르게이 미하일로프와 그의 부하 드미트리 도쿠차예프가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을 어기고 CIA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함.
-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이 직접 CIA 요원들과 접촉했는지 아니면 중개인을 통해 접촉했는지, 어떤 정보를 어떤 대가를 받고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음.

2017. 2. 2.

■ 트럼프 정부 ‘러시아 크림 병합 인정하지 않는다’ 입장 확인(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미국 행정부도 전(前)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1일(현지시간)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블라디미르 엘첸코는 이날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가 며칠 전 자신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자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함.
- 엘첸코 대사는 “헤일리 대사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했다”며 “이에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함.

라. 중·일 관계

2017. 2. 2.

■ 중·일 또 설전...“일본, 영국서 ‘중위협론’ 퍼뜨려”(연합뉴스)

- 일본이 영국의 한 싱크탱크에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위협론’을 퍼뜨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일 영국의 한 매체가 이 같은 보도를 했다고 직접 당사자인 주영 일본대사관이 이에 침묵하고 있다고 보도함.
- 영국의 더선데이타임스는 지난달 29일자 보도에서 일본이 영국의 고위급 정치인들 사이에 ‘중국 위협론’을 확산하기 위해 영국의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JS)에 월 1만2천475 달러(1천440만원)를 주고 ‘거래’를 했다고 폭로함.

마. 중·러 관계

2017. 2. 2.

■ 러 첨단전투기 수호이-35 10대 올해 안에 중국에 인도(연합뉴스)

- 러시아가 올해 안에 자국의 최첨단 전투기 수호이(Su)-35 10대를 중국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러시아의 대외 군사협력 기관 관계자가 2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밝힘.
- 관계자는 “Su-35 전투기 4대는 이미 지난해 말 중국 측에 인도됐고, 2차분 10대는 올해 전달될 것”이라며 “최종 3차분 10대는 2018년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소개함.
- 러시아는 지난 2015년 11월 Su-35 24대를 중국에 수출하는 약 20억 달러(약 2조 3천2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바. 일·러 관계

2017. 2. 2.

■ 러일 분쟁지역 ‘공동경제활동’ 진전되나..3월 첫 공식협의를(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 활동과 관련해 내달 도쿄에서 공식협의를 시작하기로 함.
-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 심의관(한국의 차관보급)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만나 오는 3월 양국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식협의를 열기로 합의함.

- 내달 협의에선 공동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과거 쿠릴 4개 섬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섬 방문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Ⅲ 북한인권

■ 개요

| 분류 | 일자 | |
|----------------------------|------|---|
| 북한인권 국제동향 | 1.28 | 미국 난민심사 강화로 탈북 난민 입국 잠정중단...영향은 미미할 듯(미국의소리) |
| | 2.1 | 北 정치권리·시민자유 44년째 '최악 중 최악' 평가(연합뉴스) |
| | | 유럽 탈북민 단체, 브뤼셀서 '김정은 ICC 회부 촉구' 행사(미국의소리) |
| | 2.3 |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회의 다음 주 서울 개최(미국의소리) |
| 북한인권 내부동향 | 1.30 | 北매체, 南 이산가족 생사확인 요구는 언어도단(연합뉴스) |
| | 1.31 | 北, 유엔사무총장에 "종업원 집단탈북은 납치" 주장 서한(연합뉴스) |
| 북한인권 남한동향 | | |
|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문포로 | 1.30 | 납북자단체 "北, 납북자 대상 사상교육 30년 만에 재개"(연합뉴스) |
| | 2.1 | 트럼프 '반이민'에 방콕서 난민 수백 명 받 묶여...탈북민도 영향(연합뉴스) |
| 대북지원 | 1.28 | UNDP, 지난해 300만 달러 대북지원...다음 주 사업 연장 결정(미국의소리) |
| | 1.30 | 유엔, 북한 등 재해국가에 1억불 투입(연합뉴스) |
| | 1.31 | 유엔, 상반기 대북지원 600만 불...작년보다 25% 감소(연합뉴스) |
| | | 유엔, 북한서 5년 계획 새 지원 사업 착수(연합뉴스) |
| | 2.2 | 국무부, 대북 지원은 유니세프 요청 따른 것(미국의소리) |
| | | UNDP대북지원 사업 올 상반기도 중단(자유아시아방송) |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 28.

■ 미국 난민심사 강화로 탈북 난민 입국 잠정중단...영향은 미미할 듯(미국의소리)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무기한 금지함. 또 이른바 '특별우려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도 90일 간 금지함.
- 이에 따라 탈북 난민들도 적어도 앞으로 4개월 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음.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단 한 명이라도 탈북 난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탈북 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함.

2017. 2. 1.

■ 北 정치권리·시민자유 44년째 '최악 중 최악' 평가(연합뉴스)

- 북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보장 수준이 44년째 '세계 최악 중 최악'으로 나타남.
- 1일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17 세계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정치권리와 시민자유가 '세계 최악 중 최악'인 11개국에 포함됨.
- 북한과 함께 이름을 올린 국가는 시리아, 에리트레아, 우즈베키스탄, 남수단, 튀르키예, 소말리아, 수단,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였음.

■ 유럽 탈북민 단체, 브뤼셀서 '김정은 ICC 회부 촉구' 행사(미국의소리)

- 유럽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30일 벨기에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영상과 사진 전시회를 열었음.
- 유럽 탈북민 단체인 재유럽탈북민총연합회(유럽총연)는 이날 브뤼셀의 변화가인 그랑플라스에서 전시회를 열고 국제사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들은 영상에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 문제와 아동 권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함.

2017. 2. 3.

■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회의 다음 주 서울 개최(미국외소리)

-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회의를 열어, 42개 국에서 발생한 약 600건의 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힘.
- 다섯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이 기간 동안 강제실종 희생자 가족들과 해당국 당국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별 사건들과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임.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임.
-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도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당국에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돌려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즉각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있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1. 30.

■ 北매체, 南 이산가족 생사확인 요구는 언어도단(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30일 우리측이 최근 북측에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언어도단’이라며 비난함.
- 북한의 선전 매체 조선의오늘은 이날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가로막아오다 못해 종당에는 사상 최악의 북남대결사태를 몰아와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모든 길을 차단해버린 것이 바로 괴뢰패당(우리 정부)”이라며 이같이 말함.
- 이 매체는 “이산가족 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인도주의 문제를 저들의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치장물로 삼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통치위기수습과 보수 재집권을 실현해보자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함.

2017. 1. 31.

■ 北, 유엔사무총장에 “종업원 집단탈북은 납치” 주장 서한(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난해 4월 중국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납치’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유엔의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지난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발송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서세평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날 각각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의장에게 우리 정부가 탈북한 종업원들과 김씨를 돌려보내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2017. 1. 30.

- **납북자단체 “北, 납북자 대상 사상교육 30년 만에 재개”(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을 30년 만에 재개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최성룡 납북자기족모임 대표는 30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말 인민보안성이 주관해 도(道)별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및 이들의 가족들을 함께 소집해 강습교육(사상교육)을 시행했다”고 말함.
 - 최 대표는 이어 “북한 당국이 전국 규모의 ‘중앙당 강습교육’도 조만간 부활시킬 것이라는 제보도 들어왔다”면서 “인민반장이 이들에 한 번꼴로 납북자들을 찾아와 동향을 파악해가는 등 감시통제가 심해졌다”고 밝힘.

2017. 2. 1.

- **트럼프 ‘반이민’에 방콕서 난민 수백 명 발 묶여…탈북민도 영향(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태국 수도 방콕에 체류하는 난민 수백 명의 미국행이 불투명해짐.
 - 이들 가운데는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현지 관계자는 “방콕에 들어온 뒤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민도 일부 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미국 내 재정착 승인을 받고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행이 불투명해진 예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함.

5. 대북지원

2017. 1. 28.

■ UNDP, 지난해 300만 달러 대북지원…다음 주 사업 연장 결정(미국의소리)

- 유엔개발계획 대변인실은 27일 ‘VOA’에 지난해 북한에서 계속 벌여오던 네 가지 사업을 중점 진행했다고 말함.
- 대변인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으며, 주로 식량안보와 농촌 지역 에너지 개발, 환경, 재난 감소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힘.
- 유엔개발계획은 신청서에서 “국제 은행 거래와 물품 획득, 조달과 관계된 2016년 사업 운영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며 “현 북한 국가프로그램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1년 연장을 신청한다”고 밝힘. 연장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됨.

2017. 1. 30.

■ 유엔, 북한 등 재해국가에 1억불 투입(연합뉴스)

-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각종 재해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음.
-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지목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카메룬과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그리고 우간다 등 아홉 곳임.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나라에 미화로 1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힘.

2017. 1. 31.

■ 유엔, 상반기 대북지원 600만 불…작년보다 25% 감소(연합뉴스)

- 유엔이 올해 상반기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에 600만 달러(70억 원 상당)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함.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지원품 조달 명목으로

대북지원활동 자금을 지원한다며 지난해 상반기 800만 달러(93억 원)보다 25% 감소한 규모라고 설명함.

- 이런 지원으로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은 북한 내 상주 조정자 역할을 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과 협의해 600만 달러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결정할 전망이다.

2017. 2. 2.

■ 유엔, 북한서 5년 계획 새 지원 사업 착수(연합뉴스)

- 유엔이 북한을 돕기 위한 새 5개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일 보도함.
- VOA는 “유엔이 북한과 체결한 ‘유엔 5개년 전략협약’이 지난달 발효됐다”면서 “유엔은 협약에 따라 2017~2021년 10개 이상의 유엔 기구들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힘.
- 지원 분야는 식량과 영양 안보, 사회개발사업, 대처 능력 강화, 데이터와 개발 관리 등 4개라고 VOA는 전함.

■ 국무부, 대북 지원은 유니세프 요청 따른 것(미국의소리)

-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를 하루 남기고 실행에 옮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수혜 지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힘.
-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기금의 실제 전달 여부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 (USAID)가 유니세프에 100만 달러를 “약정(obligate)”한 것이라고 설명함.
- 국무부는 현재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에 승인한 지출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UNDP대북지원 사업 을 상반기도 중단(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은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5년 주기 대북지원 ‘국가프로그램’의 1년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함.
-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사업지원국(UNOPS) 운영이사회’는 지난 1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7년 상반기 정규 회의에서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출한 2011~2015년 주기 북한 ‘국가프로그램’의 2017년 1월1일~12월31일 연장 신청을 오는 6월 예정된 중반기 정규회의에서 심의하기

- 로 결정했음.
- 이로써 지난해 12월31일로 중단됐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최소 6개월 간 중단되게 되었음.